

2008년 업무계획

이 자료는 2008년 3월 18일 12:00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 긍정, 신뢰, 희망, 창조 =

2008. 3. 18.

농림수산식품부

- I. 현황과 평가 1
- II. 비전과 전략 5
- III. 농어업 및 식품산업 혁신방안 9
- IV.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30
- V. 조직 융합 및 입법 추진계획 34

< 참고 1 >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 참고 2 > 2008년 정부입법 주요내용

1. 현황과 평가

가 국가경제와 농림수산물산업

□ 식품산업(식품제조·외식업)은 총 생산액 100조원, 고용인력 163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중요산업

○ 농림어업 총 생산액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정체

(단위 : 조원, 천명)

구분	농림어업		식품산업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00	37.2	2,243	72.7	1,608
'06	41.7	1,785	99.8	1,629

□ 곡물자급률은 사료곡물 수입증가 등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 쌀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감소되어 수급균형 유지

- * 곡물자급률 : ('00) 29.7% → ('06) 28.0
- * 쌀 수급('07) : 수요 5,061천톤, 공급 5,756, 재고 695

◆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 필요

나 생산 단계

□ 65세 이상 경영주가 전체의 47%('07)로 영농인력이 고령화

- *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수(비중) : ('00) 452천호(33%) → ('07) 572(47)

○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45ha('07)로 영세·소농 구조

□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가 과수·쌀 등에 비해 빠르게 진전

- * 돼지 1천두 이상(호수비율/두수비율) : ('90) 0.3%/23.3% → ('06) 27.4/80.0
- * 논 3ha 이상(호수비율/면적비율) : ('90) 1.2%/6.2% → ('06) 5.3/30.0

□ 생산인프라는 안전 영농이 가능한 수준

- * '06년 진흥지역 논 경지정리율 90%, 수리달률 79, 벼농사 기계화율 90

◆ 젊고 유능한 30~40대 영농주체의 발굴·육성 필요

다 가공유통판매 단계

□ 품목별 농어가 조직화가 미흡하고 협동조합·농업법인은 영세

- 협동조합의 산지농산물 취급비율이 50% 미만('06 : 47%)
-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의 평균매출액이 17억원 수준, 매출액 10억원 미만 법인 비율은 67.2%
- * 농업법인 수(영농조합/농업회사) : ('00) 3,852개/1,356개 → ('06) 4,410/898

※ 파프리카, 양돈, 양계 등의 경우, 점차적으로 생산-가공-유통 일관 처리 시스템을 갖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유통채널이 도매시장 위주에서 대형마트·전자상거래 등으로 다변화

- * 대형마트 유통 비중(천톤, %) : ('00) 871(6.5) → ('06) 1,885(14.1)
- * 전자상거래·직거래 비중(천톤, %) : ('00) 1,022(7.7) → ('06) 1,999(14.5)

◆ 지역단위로 「생산-가공-유통」의 주체 육성 및 조직화 필요

라 농어촌 현황

□ 농어촌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 수준

* 농어촌인구(전체인구대비 비율) : ('95) 9,572천명(21.5%) → ('05) 8,764(18.5)

○ 88개 군 중 57개 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초과(초고령사회)

*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이하 인구)는 농어촌(108.2%)이 도시(36.7%)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05년 기준)

□ 도시지역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고 상·하수도 등 기초시설 미흡

* 농촌주택 노후화율(35년 이상 주택 비율, '05) : 15.4%(도시 2.8)

* 상수도 보급률('05) : 56.9%(도시 98.3), 하수도 보급률 : 35.8%(도시 94.2)

□ 보육시설 부족,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

* 1,418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500여개(35% 수준)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늘었으나,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 의료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 ('00) 22% → ('06) 50

※ 30대 도시민들은 농어촌 이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교육·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을 희망 : 46.3%('0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정주공간 조성 필요

마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정부 정책 방향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자생적 경영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부족

⇒ 농어업인·지자체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 부여

□ 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안정 정책에 치중,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부족

⇒ 농어촌에 소득을 창출시키는 '돈 버는 농어업 정책'이 농어촌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

□ 생산기반 확충·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소비자 선호 및 유통환경 변화로 새로운 수요 창출에 애로

⇒ 농어업의 범위를 식품산업, 수출 등 2, 3차 산업으로 확장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개별 농가 차원의 규모화·전업화로 농업구조 개선에 진전이 있었으나, 좁은 국토면적과 농가 고령화 등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사람·조직·시스템 등 S/W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내실있는 농어업 강국을 지향

◆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어업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개방에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응

< 네덜란드 농업의 시사점 >

◆ 한국농업과의 비교('06)

	네덜란드(A)	한국(B)	A/B
경지면적 (천ha)	1,899	1,800	1.1배
농가수 (천호)	80	1,245	1/16
호당 경지면적 (ha)	23.9	1.45	16
농가소득 (만원)	8,155	3,230	2.5
농산물 수출액 (억불)	582	23	25.3
농산물 수입액 (억불)	336	110	3.1

◆ 네덜란드 농업의 성공요인

- 규모화 · 조직화 · 차별화 · 기업가정신 -

① (규모화) 생산은 「기업형 가족농」 중심

- 규모화(호당 규모가 우리의 16배), 소수 정예화된 농업경영체제
- 대규모 간척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토지비용 절감

② (조직화 · 차별화) 유통은 「협동조합 기업」이 주도

- Aalsmeer 경매장(회원 5,000여명), Greenery 등 유통회사 주도

③ (기업가 정신 함양) 농업인력 교육 중시

- 농업전문교육기관(PTC+, 지도자 150명)에서 전문인력 양성
- Wageningen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축

◆ 네덜란드 농업의 성과

-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국(농업 무역흑자로는 세계 2위, 네덜란드 무역 흑자의 44%)
- 화훼류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60% 수준을 점유

II. 비전과 전략

□□ 비전 :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

□□ 목표 :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 매출 1천억원 이상 농식품 유통법인 100개 육성

□□ 전략

- ① 공급 push → 수요 pull 방식으로 정책 전환
 - 농수산물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방식
- ②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
 - 1차산업에 2·3차산업을 접목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산업화
- ③ 농어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 생산·유통 조직화 실현 및 민간의 인력·자본 활용 유도

□□ 실천과제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유통회사 ·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 · 대규모 농어업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대 인력유치 (뉴타운 조성) · CEO 100명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업 활성화 · 외식·한식산업 육성 ·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 쌀 가공식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산지 규제완화 ·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사례 발굴·개선

조직화·차별화·기업가정신으로 성장 견인

< 정책의 구분 : 창과 방패 >

- ◆ 농정의 틀을 '돈 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으로 구분
 - 돈 버는 농어업 ⇒ 공격적인 '창'의 정책 : 농식품 유통회사, 핵심인력 육성, 규제완화 등
 - 살 맛 나는 농어촌 ⇒ 방어적인 '방패'의 정책 : 직접지불제, 지역사회유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

구분	경쟁력 강화정책	생활 지원정책
목표	돈 버는 농어업	살 맛 나는 농어촌
성향	창(공격적 정책)	방패(방어적 정책)
가치	효율성(Efficiency) - 시장경쟁의 촉진	형평성(Equity) - 시장실패의 보완
전략	1. 산업으로서 농식품산업 육성 2. 핵심 경영주체의 육성 3. 규제완화 및 경영효율화	1.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 2.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유지 3.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 돈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 재정구분 >

- ◆ '08 투융자 13.7조원 중 「돈 버는 농어업」 비중 12.7%
 - 돈 버는 농어업 : 1.7조원(12.7%)
 - 교육훈련, R&D, 수출확대, 유통혁신 등
 - 중간 영역(Mixed area) : 5.7조원(41.2%)
 - 시설·장비 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화 등
 - 살 맛 나는 농어촌 : 6.3조원(46.1%)
 -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
- ⇒ 「돈 버는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필요

분야별 투융자 현황

(단위 : 억원, %)

돈 버는 농어업	17,328	12.7	중간 영역	56,353	41.2	살 맛 나는 농어촌	63,010	46.1
맞춤형 농정 추진시스템	95	0.1	영농규모화 사업	3,774	2.8	직접지불제 확충	17,314	12.7
농업인 교육훈련	593	0.4	시설장비 현대화	27,164	19.9	경영안정 강화	10,471	7.6
수출확대 지원	1,037	0.8	농축산물 안전관리	2,084	1.5	복지여건 개선 (경영이양자불 포함)	4,138	3.0
성장동력 확충	5,457	4.0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2,131	1.5	교육여건 개선	493	0.4
농식품 유통혁신	7,673	5.6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68	0.1	농촌 지역개발	13,151	9.6
식자재·외식산업 육성	80	0.1	생산기반정비	18,530	13.6	산림자원 관리	10,134	7.4
수산식품산업육성	1,758	1.3	어업자원관리	2,107	1.5	감척 및 수산경영안정	4,327	3.2
수산분야 성장동력	635	0.4	어업질서 정착	395	0.3	어촌개발 및 어업인 복지	2,982	2.2

Ⅲ. 농어업 및 식품산업 혁신방안

1 농식품 유통혁신

□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산지 유통을 주도할 마케팅 주체 육성

- 시·군 단위 유통회사를 설립,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거래 교섭 능력 확충
- 품목별 국가대표조직을 육성,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산자 스스로 해당 품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비지에는 기존 유통망 확충과 함께 다양한 직거래 채널 확대

- 식품·외식업체의 식재료 공동구매 유도(가공·공급센터 운영)
- B2B·B2C 사이버 거래, On-Line 통합결제시스템 확충

□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설립,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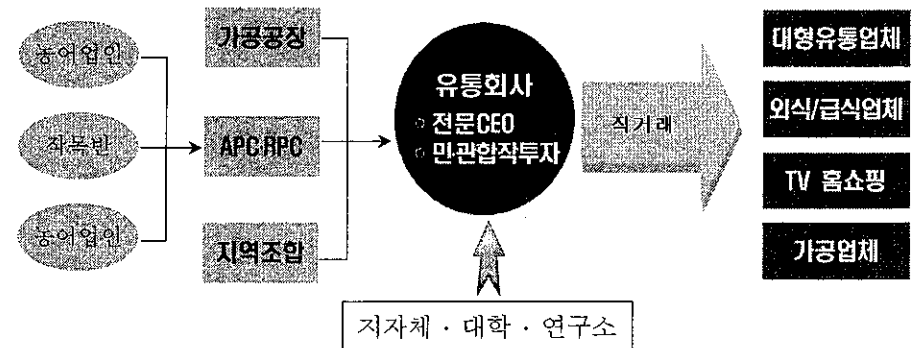


가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 ◇ 시·군에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유통회사 설립
 - 회사설립 여건이 갖춰진 지역 중 경쟁을 통해 선발
- ◇ 유통회사가 시·군 행정주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역농림 수산물 마케팅 주도

□ 지역생산물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천억원 규모 이상으로 기준 설정

- 조직 : 전문 CEO중심 책임경영이 가능한 독립법인
 - 전문 CEO와 중견 전문인력을 공모,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출자 :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의 출자 유치로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본(약 100억원) 확충
 - 농어업인·농수협·시군이 각각 일정비율(20%)이상 출자 의무화



□ 여건이 갖춰진 시·군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세부계획 확정
- 지자체가 출자금 조달(농어업인 포함), 전문경영인 영입방안 등 계획을 제시하면 「민·관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농어업 CEO 인재 Pool」에서 전문경영인의 영입 추진

- 대기업 임원 출신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CEO 후보자(100명) 공모
 - CEO 후보자에 대해서는 농업마케팅 등 전문교육 실시
- 유통회사가 인재 Pool에 등록된 CEO영입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브랜드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비 등 차등 지원

- 가공·상품화시설은 별도 지원없이 기존 APC·RPC 등 활용
- 판매전문조직으로 특화하여 기존 조직과 경합문제 해결
 - *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통회사 판매장(SSM) 설치 추진(국토해양부 협의중)

	양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 T/F 및 자문단 구성 (3.20)	· 유통회사 세부계획 확정 (4.30) · CEO 교육기관 공모(5.31)	· 유통회사 추진계획 공모(8.31) · 대상 시군확정(9.30) · CEO 후보자 선정(9.30) · CEO 후보자 교육(12.31)

나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 품목별 대표조직이 주인이 되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역량 강화

□ 쌀, 한우, 돼지, 사과, 감귤, 넙치 등 생산액이 3,000억원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조직 구성 유도

- 역할 :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R&D, 교육훈련 등
- 정부·농수협·전문가 등 전담지원팀을 구성, 기술·마케팅을 지원하고 조직화 정도를 보아가며 수급조절 등 권한이양
 - ※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양돈·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미국 Sunkist 연합회 : 생산자협회를 설립, 'Sunkist'라는 공동상표로 전세계 마케팅
* 6천여명의 조합원으로 '04년 사업실적은 총 9.8억달러

□ 단계별 품목조직 발전방향(안)

1단계 : 조직화정도에 따라 R&D 과제선정, 자조금 조성 등의 권한과 책임을 대표조직에 부여

* 정부역할 : 사업자 추천 등의 권한과 책임을 단계적 이양

2단계 : 품목조직 스스로 수급조절,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당면문제 해결

* 정부역할 : 자금집행권 등 권한의 대폭이양

	양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 조직 현황 파악(3.30)	· 대표조직 육성 세부계획 마련(6.30)	· 법인 설립방안 마련(9.30) · 법인 설립(12.31)

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

□ 대규모 생산·가공·유통을 통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모델 창출

- 생산, 가공, 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합된 농업 Complex 형태
-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운영
 - 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외부자본도 적극 유치
- 농지는 우선 간척지 장기 임대 방식으로 확보(300~500ha 규모)
 - 외해 양식산업을 운영하는 대규모 회사도 설립 추진

□ 정부는 간척지 임대,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간척농지 장기임대(30~50년)
- 경지정리, 용수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참여 농업회사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 등

□ 금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실천계획	양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 민·관 전문가 T/F 구성(3.31)	· 시범사업 계획 수립(6.30) · 농어촌정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 수립(6.30)	· 민간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9.30) · 회사 설립(12.31)

2 핵심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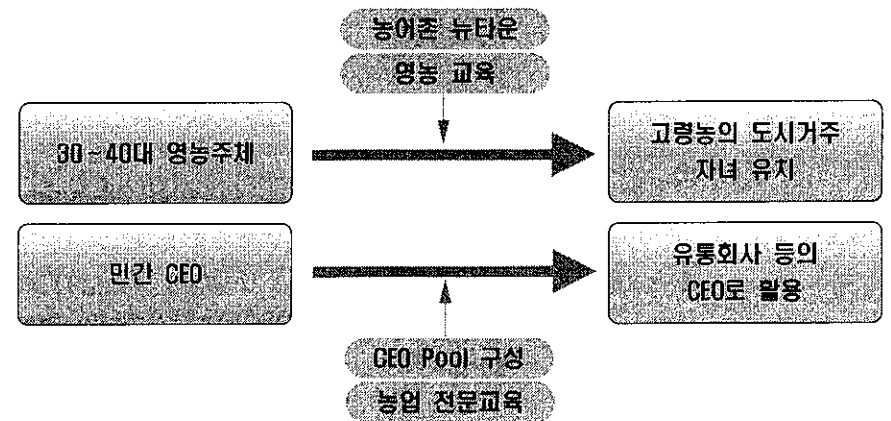
- ◇ 농어업·농어촌의 성장을 주도할 30~40대의 젊은 인력 양성
- ◇ 고수익 농어업 실현을 위한 유통·가공분야 전문인재 영입

□ 30~40대 인력이 농촌에 거주를 꺼리는 문제를 One-Stop 해결

- 뉴타운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자녀 교육여건, 교우관계 등 해결
- 별도의 교육과정,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 정착 유도

□ 타산업 분야 CEO를 농어업 부문에 유치하여 경영혁신 유도

- 농업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지역 농수산물 마케팅 주체로 활용



가 30~40대 농업 인력 확보

- ◇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토록 지원
- 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자녀교육 여건 조성
-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실시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 지역에 유치

- 귀향한 자녀들이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농어촌 뉴타운 조성
-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 도모

□ 경영승계 의사가 있는 젊은 출향자녀를 시장·군수 주도 하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모집

- 수요가 확인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9년 10개소)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 중 일부를 활용, 100~300세대 규모의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
- * 입주자격, 공급면적 등은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 개인별 영농·영어계획에 맞는 맞춤형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지도하고 경영에 필요한 자금·토지·컨설팅 종합 지원

○ 이론·실습·해외연수를 연계한 분야별·발전단계별 종합 교육 실시(네덜란드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

○ 선도 농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영농창업자금, 경영 개선자금 등 단계적 지원 실시

- 선도 농어가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영농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영유아 보육에서 대학졸업까지 자녀들의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 뉴타운 지역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기숙형 공립고 등을 유치하여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제공

- '10년까지 150개 기숙형 공립고 선정(교육과학기술부)

* 기숙사 및 도서실·어학실 등 시설 확충, 원어민 강사 배치 등

○ 대입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할당제 등의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 진 계 획	· 국토해양부와 공동TF 구성(3.20)	· 추진계획 마련(4.15)	· 시·군 공모 추진(8.31) ·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12.31)

나 마케팅 CEO 100명 확보

- ◇ 타 산업분야 임원출신을 선발, 축적된 마케팅·경영 노하우를 빠르게 접목시켜 농업마케팅 혁신의 새 바람 확산
- 선진 농업현장 방문 등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농어업 CEO로 육성
- 시·군 유통회사, 품목대표조직 등의 전문 CEO로 영입

- 타 분야 임원급 출신 공모·선발('08년 50명, '09년까지 100명)
 - 식품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분야 임원급 이상 경력자 우대
- CEO 후보자의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적인 「농어업 CEO MBA 교육」 기회 부여
 - 농산업 현황, 농어가와의 갈등관리, 국내외 선진지 방문 등
- 선발된 농어업 CEO 인재 Pool 정보를 담은 농어업 CEO 정보망을 구축, CEO 후보자와 업체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고용 전까지 CEO 후보자의 경영·마케팅 자문 기회 등 알선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 CEO 영입수요조사(3.31)	· CEO육성계획 확정(4.30) · 교육기관 공모(5.31)	· 후보자 선정(9.30) · 정보망 구축(9.30) · 후보자 교육 완료(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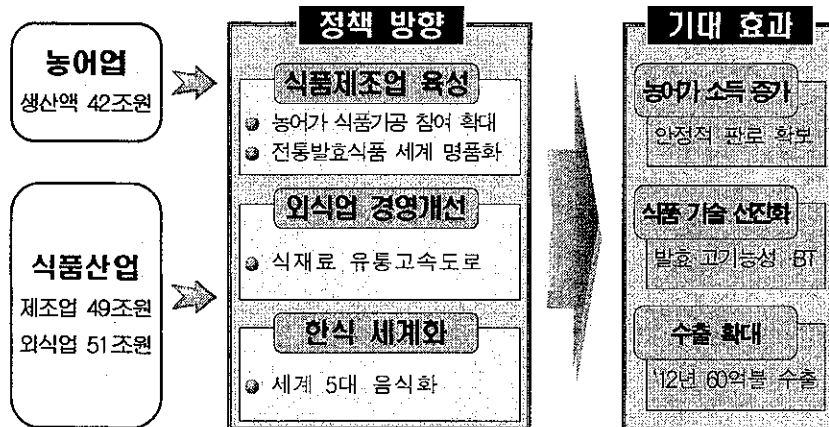
〈 시장·군수 및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십 구축 〉

- ◆ 시장·군수가 지방농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
 - 장관과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농정 워크숍 개최(4.16~4.30)
 - 4월 중 1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워크숍 개최
 - * 전국 165개 시·군 중 농가인구/전체인구 비중이 10% 이상인 지역
 - 시·군 단위 유통회사,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 등 토론
 - 장관과 시장·군수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 화상대화 채널 구축(3.24 개통)
 - ※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현장경험을 활성화하여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분위기 조성
- ◆ 산지·소비자 상생공동협약 선포
 - 내용 : 농어업인 대표와 소비자 대표가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소비자 : 우리농산물 안정적 구매, 홍보 및 브랜드 개발
 - 산지 : 소비자 수요에 맞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 정부 : 상호협약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등
 - 일시 및 장소 : '08. 3. 24(월), aT Center
 - 참석 :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 소비자 유통주체(50여명), 농협 조합장 등 산지대표(50여명), 정부대표

3 | 식품산업 육성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실현
 - 「전통·발효식품」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명품으로 육성
-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경영 효율화 지원
 - 식재료 공급체계 혁신으로 외식업체 경영비 절감
- 「韓食 세계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한식의 표준화·글로벌화 기반을 확립하여 세계 5대 음식화 추진
- '12년까지 60억불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
 - 농식품 수출에 해외공관 적극 활용(LA, 오사카, 상하이 등 20개소)

<식품산업 육성 추진체계 및 효과>



가 | 식품제조업 활성화

- ◇ 전통·발효식품 국제화, 식품안전시설 확충 및 식품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식품제조업을 활성화
 -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시·군 단위 클러스터를 병행 추진

- 「6대 전통·발효식품」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
 - 고추장·된장·간장·김치·천일염·젓갈의 생리 활성화·질병예방·건강기능성 등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
 - 세계 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 품질개선 등 지원
 - * 순창 고추장연구소는 영국 켈덴연구소와 유럽시장조사·상품개발 공동추진
 - 고추장·된장의 국제식품규격 채택 추진('11년 CODEX 채택 목표)
- 세계적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식품 R&D 허브로서의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총 사업비 6,300억원 추정)
 - R&D·생산·유통·수출까지 일관 추진체계를 형성
 -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으로 식품전문단지 조성
 - 입지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08.8), '12년까지 단지조성
 - 민관 합동 「국가 식품클러스터 추진단」 구성(4.7)
-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 140개 조성
 - 생산자, 가공·판매업자, 연구·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
 - * '08년 중 시·군 특성을 살린 모델 개발 및 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 ◆ 일본 : '05년부터 식료산업클러스터 조성, 현재 48개소 운영('08.1)
- ◆ 순창 장류 클러스터 : 식품클러스터 초기 형성단계
 - 고추·콩 계약재배 확대 : ('04) 6업체, 31농가, 45백만원 → ('06) 27, 543, 10억원

□ R&D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 촉진

- 미래 성장형 핵심 식품기술(발효식품, 고기능성, 친환경, 포장, BT·NT)에 R&D 집중 투자
 - 기술개발 수요조사, 컨설팅, 상용화·보급 담당조직 신설(한식연)
 - * 농림 R&D 중 식품분야 투자 규모 확대('09 : 200억원 → '12 : 400)
- 농업관련 펀드 투자대상을 식품기업 등으로 확대·다각화
 - 농업전문펀드·농협사모펀드를 '07년 600억원에서 '12년까지 2,300억원으로 확대

□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을 별도로 신설, 시설기준 완화 추진(현재는 일반 식품업체와 동일기준 적용)
- 중소식품 및 OEM 업체 등에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08) 용자 150억원 → ('12) 190

	양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단 구성(4.7)	· 식품산업발전대책 확정(6.20) · 식품정책 조직 정비(6.28) ·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6.28)	· 농어가 식품제조·판매 규제완화(7.31) ·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본 계획 수립(8.31) · '09 지역식품클러스터 대상 시군 선정(12.20)

나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韓食] 세계화

- ◇ 식재료 가공시설 운영·직거래 확대 등으로 외식업체 경영 개선 및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 ◇ 조리법·명칭 표준화, 해외 한식당 인증제 등을 통해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구현

□ 외식산업의 현대화 및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식재료 계약생산 및 산지 직배송 확대
 - '식재료 중개센터' 설치(6.30), 계약생산자금 융자지원
 - * 외식기업 롯데리아와 대관령원에농협은 가공채소의 직공급을 통해 식재료 원가 절감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 산지 식재료 가공시설, 집중조리시설(CK) 등 설치 운영
 - '08년 신선평이 농산물 가공시설 5개소(100억원 용자)를 시범 설치하고, '09년부터 주요권역별·거점도시별 확대
 - * 일반 외식업체의 프라이믹 코스트(식재료비+인건비)는 65~70% 수준이나, CK를 갖춘 선도 외식기업은 45~50% 수준
- 식자재 이용현황·경영여건 등의 실태조사 및 관련정보를 DB화하여 업계에 제공
 - * '07년부터 추진 중인 식품외식정보 조사·분석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 표준화·메뉴개발 등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토대 마련

- 대표 한식 300종의 조리법·명칭 표준화 및 국가별·지역별 대표 상차림·메뉴를 개발하여 대내외 홍보·보급
- 우수 한식 교육기관 2~3개를 지정하여 국제 교육기관으로 육성
 - *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아카데미 : 15개국, 26개 학교 개설(연 2만명 교육)

□ 해외 한식당 인증제 도입 및 해외진출 지원

- 한식당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식당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실태조사 : 일본('07 완료), 미국·중국('08), EU·동남아('09)
 - * 태국은 해외 자국 식당 인증제를 통하여 국산 식자재 연 60억불 매출 (태국음식 세계화 프로젝트 'Kitchen of the World'를 '01부터 추진)
- 해외 진출 한식업체에 정보 및 금융지원 검토
 - * 국내 외식기업 '제너시스BBQ'는 38개국, 46개 법인, 300여 점포 운영
- 「한식 세계화 선포식」 개최(9.3) 등 다각적 홍보 추진

실천계획	양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 한식 세계화 포럼 구성 (4.4)	· '식재료 증개센터' 설치 (6.30)	· 조리 아카데미 모델 개발(7.31) · 한식 세계화 선포식(9.3)

〈 Global Food Festival 개최 〉

◆ 목적 : 「국민과 함께 하는 농림수산물산업」 선포

-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본격 육성 선언
- 농림수산물식품부 출범이후 6개월간의 정책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발표, 정부의 농식품산업 정책의지를 대내외 천명

◆ 일시 : 2008. 9. 1 ~ 7

◆ 행사성격 : 온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축제 한마당

<주요 행사(예시)>

- 우수농산물, 명인인증식품, 민속주, 발효식품 등 전시
- 식품가공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외식업체 소개 및 상담
- 식품관련 정책홍보(한식세계화, HACCP, 이력추적시스템, GAP 등)
- 지역·해외식품 전시행사와 연계
- 해외한식당 경영자, 재외공관 조리사 및 수입업체 초청행사

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 ◇ 단기적으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구입 부담을 완화 하면서, 청보리·밀 등 국내생산 확대 추진
- 장기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안정적 곡물확보능력 강화

< 가격 동향 >

- 국제곡물가격은 '07부터 급상승, 당분간 상승추세 유지 전망
 - * '06/'07 평균대비 밀은 141%, 옥수수 56%, 대두는 91% 상승('08.3.10 기준)
- 에너지용 수요 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원인
 - * 세계 곡물재고율(14.7%)은 '75/'76년 이래 최저 수준
- 높은 곡물 해외의존도(72%)로 인해 축산물 생산비 및 소비자의 식품구입비 부담 증가 우려
 - * 배합사료 가격인상('07년 26%)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1조 4천억원 증가

< 대응 방안 >

-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 지원(연리 3%, 1년 일시상환)
 - 농협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정부는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이차 보전
 -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 보증(간이신용조사) 추진
 - * 특례보증 : 일반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 1억원

-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 청보리·밀 등 재배 확대

-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24만ha까지 조기('12)에 확대
 - * 조사료 재배면적 : ('07) 155천ha → ('12) 240 (청보리 100천ha 포함)
 - 조사료 급여 비율을 45%에서 60%까지 확대하여 배합사료 수입 대체 및 쇠고기 품질 개선
 - * 조사료 24만ha 재배시 소 배합사료 140만톤 대체효과(5,000억원의 수입 대체 및 2,000억원 사육비용 절감)
-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밀 재배면적 확대 추진
 - * 밀의 국내외 가격차 : ('02) 4.4배 → ('04) 3.8 → ('07) 1.7
 - * 재배면적(생산량) : ('07) 1,928ha (7천톤) → ('12) 14,300 (50)

-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여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 능력 제고

- 국내 곡물수입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 공동·장기 구매 및 선물거래 활용 등 구매방법 다양화 유도
-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자원 개발 지원
 - 농지관리기금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 금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추진

실 전 계 획	양우 20일	상반기	하반기
	· 밀 생산 확대 민간·정부 협의체 구축(3.31)	·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 확대(관세법 시행령 개정)(4.30)	· 농지기금 지원 방안 마련(12.31)

라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 밀가루 식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 수입쌀 저가공급을 통해 우선 쌀국수 시장 수요를 창출한 후 국산 쌀로 범위를 확대

□ 의무 수입되는 쌀(MMA)을 쌀면(국수·라면)용으로 밀가루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 쌀함량이 높은 제품과 웰빙 수요를 겨냥한 생면 등의 개발 지원

◆ 한국식품연구원에서 '08.2월,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쌀국수 개발 (쌀 80% 이상, 녹차 등 기능성 소재 첨가)

□ 연구기관·업체간 기술교류 확대 및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 쌀 가공업체(제분, 제조 등)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 검토

◆ 대선제분에서는 국산쌀을 이용한 쌀가루 제분 및 무균포장떡 등 가공 식품 제조공장을 건설 중('08.6월 준공 예정, 연간 24천톤 처리 규모)

□ 국산 쌀 제품은 기능성·고급 상품으로 차별화

- 가공용 다수확 품종을 개발, 원가 절감 추진
 - * 한아름(753kg/10a), 다산1호(718kg) 등은 일반쌀에 비해 1.5배 이상 수확 가능

실 천 계 획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 쌀가공 산업화 추진 T/F 구성(3.20) · 쌀면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4.7)	· 쌀면 제조업체 간담회 (4.30) · 쌀 저가공급 시범사업 실시(6.1)	· 쌀 가공식품 종합 지원 방안 마련(8.31)

4 규제완화 추진

◇ '09년까지 총 84건의 규제를 완화, 금년에는 48건 개선 추진

- * 전체 농림수산 분야 규제 400건(46개 법률) 중 규제개혁 대상 100건
- 특히,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지·산지 규제를 적극 완화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굴하여 개선

□ 농지 소유·거래규제를 완화하고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한계농지는 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전국에 약 20만6천ha로 추정)

-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및 이양

* 현재 농지 20ha, 산지 200ha 초과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이 허가

-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 이사 중 농업인 비율 완화(1/2 → 1/4) 등 농지소유요건 완화

-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 폐지(농지은행 위탁조건)

□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 및 농업보호구역 조정

-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의무화 제도 폐지(3.5일 시행)

-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2천ha)
-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산업 단지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장관 승인절차 폐지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가공시설 면적 확대(3천→1만㎡)

□ 준보전산지 확대 및 산지전용 허가제도 개선

- 산지구분타당성조사로 개발가능한 '준보전산지' 확대(147만ha → 157)
 - * 연간 9천ha 산지전용을 감안하면 12년간 개발가능 물량
- 보전산지 내 허용되는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27개→57)

□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

-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 한도 제한(3/4) 완화
- 정책사업 지원시 민간기업과 협동조합·영농법인 등 생산자 조직간 차별적 지원 폐지 또는 완화

	양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조정지침 마련(3.31)	· 경쟁제한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6.30) · 농지법 시행령 개정(6.30)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30)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30)	·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 완료(10.31) · 농지법 개정안 국회제출(12.31) ·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12.31)

IV.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1 농어업인 소득 안정

◇ 농어가 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직불제 신규 도입 및 기존사업 정비로 농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가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WTO 허용보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확대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을 경관작물 재배에서 농촌환경·문화경관의 종합적 보전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도입

□ 고령 농업인 생활안정보장을 통한 조기은퇴 촉진 방안 추진

- 고령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확대 개편
 - 대상농지를 진흥지역 발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 인상
- 농지·주택 등을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방안 마련

	양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 경관보전직불제 개편방안 마련(6.30)	·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방안 마련(12.31)

2 생활여건 개선

◇ 여성·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농어촌 복지·교육여건 개선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재해공제 지원 확대

○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 또는 배제하여 실질적 형평성 제고

- 경감율 : ('07) 50% → ('08) 0~50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 조정

- 기준 소득금액 : ('07) 52만원 → ('08) 62

- 1인당 연간보험료 최대 지원액 : ('07) 280천원 → ('08) 335

○ 사고시 농어업인의 재해공제 보상수준을 '13년까지 산재보험 수준(사망시 90백만원)으로 확대

- 사망시 보상수준 : ('07) 35백만원 → ('08) 45

□ 농어업인의 보육여건 개선 및 취약 농어가 복지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조손가정을 양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호적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1인이 없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농어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를 통합·운영

* 시설이용 :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의 70%, 시설미이용 : 35%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중단 사유가 발생시 농사일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07 : 28억원 → '08 : 47억원)

* 지원사유 추가 : ('07) 사고 → ('08) 사고, 질병(2주 이상 입원시)

○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 고령취약 농어가의 가사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고령가구, 65세미만 사고발생 가구

□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촌지역 거주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 지원규모 : 26천명, 816억원

○ 농수산 계열 대학생 중 졸업 후 영농·영어를 희망하는 자 및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65억원)

- 영농·영어 희망 대학생 장학금(2,400명, 120만원/학기)

-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4,000명, 100만원/학기)

□ 농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개선방안 마련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직불제 유형 확대, 휴·폐경 농지의 재산 환산 제외 등 검토

V. 조직 융합 및 입법 추진계획

1 조직 융합방안

□ 농업과 수산의 화학적 융합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

- 통합 초기단계에는 조직안정을 위해 기존 인력 중심으로 배치 하되,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를 1/3수준 교차 배치
 - 특히, 농수산물 유통·식품산업 등 양 부문간 유사한 기능은 교차 배치 강화
- 사무실 재배치는 3.15~16일 마무리, 3월말까지 모든 인사 완료
 - 희망부서 지원을 받아 직상급자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인사방식

□ 초과인력(279명)은 정규조직에 준해서 운영

- 「규제개혁 T/F」, 「현장점검 T/F(농어업인 단체 파견 포함)」, 「유류사고피해 지원 T/F」 등에 초과인력 우선 활용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6.28)으로 본격적인 식품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식품정책 T/F」 한시 운영

□ 조직통합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화 및 분위기 조성 확산

- 직급별 워크숍을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비전·미션 공유
 - 타분야 직원 파악 및 상호 교류의 장 제공
- 상호 업무영역의 이해촉진을 위한 공동 현장체험학습 실시
 - 농수산 분야 직원 20~30명 단위 현장체험 및 간담회 실시

2 2008년도 정부입법 계획

-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총 28개 법률 제·개정 추진(제정 6건, 전부개정 5건, 일부개정 17건)
-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 수립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 소득·경영안정시스템 구축 등 공약사항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수요 반영

-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가칭)부채대책특별법」 제정
- 농가등록제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농기계임대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 농지, 농어촌개발, 양곡관리 등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지구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마을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농어촌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양곡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참고1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실천내용		실천일정
< 농식품 유통역신 >		
향후 20일	·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T/F 및 자문단 구성	3.20까지
	· 품목별 조직 현황 파악	3.31까지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을 위한 민·관 전문가 T/F 구성	3.31까지
상반기	·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세부계획 확정	4.30까지
	· 유통회사 CEO 교육기관 공모	5.31까지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세부계획 마련	6.30까지
	·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계획 수립	6.30까지
	· 농어촌정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수립	6.30까지
하반기	· 유통회사 추진계획 공모	8.31까지
	· 유통회사 설립대상 시군 확정 및 CEO 후보자 선정	9.30까지
	· 품목별 대표조직 법인 설립방안 마련	9.30까지
	·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관련 민간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	9.30까지
	· 유통회사 CEO 후보자 교육	12.31까지
	·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12.31까지
	· 품목별 대표조직 법인 설립	12.31까지
< 핵심인력 양성 >		
향후 20일	· 국토해양부와 농어촌 뉴타운 공동T/F 구성	3.20까지
	· 농업CEO 영입 수요조사	3.31까지
상반기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계획 마련	4.15까지
	· 농업CEO 육성계획 확정	4.30까지
	· 농업CEO 교육기관 공모	5.31까지
하반기	· 농어촌 뉴타운 조성 대상 시·군 공모	8.31까지
	· 농업CEO 후보자 선정 및 정보망 구축	9.30까지
	· 농업CEO 후보자 교육 완료	12.31까지
	· 농어촌 뉴타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12.31까지
< 식품산업 육성 >		
향후 20일	· 쌀가공 산업화 추진 T/F 구성	3.20까지
	· 밀 생산 확대 민간·정부 협의체 구축	3.31까지
	· 한식 세계화 포럼 구성	4.4까지
	·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단 구성	4.7까지
	· 쌀면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4.7까지

실천내용		실천일정
상반기	·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 확대(관세법 시행령 개정)	4.30까지
	· 쌀면 제조업계 간담회	4.30까지
	· 쌀 저가공급 시범사업 실시	6.1~
	· 식품산업발전대책 확정	6.20까지
	· 식품정책 조직 정비 및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6.28까지
	· 식재료 중개센터 설치	6.30까지
하반기	· 농어가 식품제조·판매 규제완화	7.31까지
	· 조리 아카데미 모델 개발	7.31까지
	·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8.31까지
	· 쌀 가공식품 종합 지원방안 마련	8.31까지
	· 한식 세계화 선포식	9.3
	· '09 지역식품클러스터 대상 시군 선정	12.20까지
	·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농지기금 지원방안 마련	12.31까지
< 규제완화 추진 >		
향후 20일	·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조정지침 마련	3.31까지
상반기	· 농지법 시행령 개정	6.30까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6.30까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6.30까지
	· 공정한 경쟁제한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6.30까지
하반기	·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 완료	10.31까지
	· 농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농업보호구역 보완 정비	12.31까지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		
상반기	· 경관보전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6.30까지
하반기	·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방안 마련	12.31까지

참고2 2008년 정부입법 주요 내용

법률안명	주요내용	국회제출
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및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6월
부채대책 특별법(제정)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7월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일부개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
산림보호법(제정)	산불방지장기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
농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제정)	농림과학기술정책 수립·추진근거 마련	8월
농촌진흥법(전부개정)	지방농촌진흥기관간의 연계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법(전부개정)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
농어촌정비법(전부개정)	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부당신청자 제재강화 등 미비점 개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	농특회계 용자사무위탁기관에 서민금융기관 추가	"
양곡관리법(일부개정)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일부개정)	식품산업육성 지원기능 강화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	감독규정 구체화 등 미비점 보완	"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	마주·조교사·기수 등 등록료, 면허수수료 폐지	"
수산자원관리법(제정)	수산자원상태에 따른 자원회복계획 수립	"
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	수산물·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우수수산물인증제로 전환	"
어선법(일부개정)	어선의 건·개조 허가기준 구체화	"
수산업법(일부개정)	육성수면 승인 권한 지방이양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
수산업협동조합법(전부개정)	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9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녹색자금의 기금전환 및 관련조문정리	10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일부개정)	수산 및 어업부분 통합	11월
농작물재해보험법(전부개정)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가축·농업시설 등으로 확대	12월
농지법(일부개정)	비농업인 상속 소유한도 폐지, 회사법인 소유자격 완화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농업인의 조합선택권 확대 등 조합 경쟁시스템 구축	"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	농기계공동이용 추진주체에 농협중앙회 추가	"
낙시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상에 관한 법률(제정)	낙시 및 유어행위 관련법령 통폐합	"
어선원및어선계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입출항시 승선선원의 보험가입확인제 도입	"